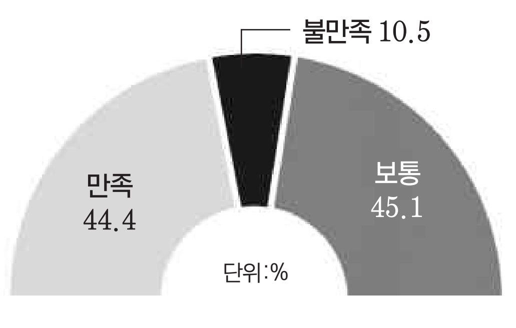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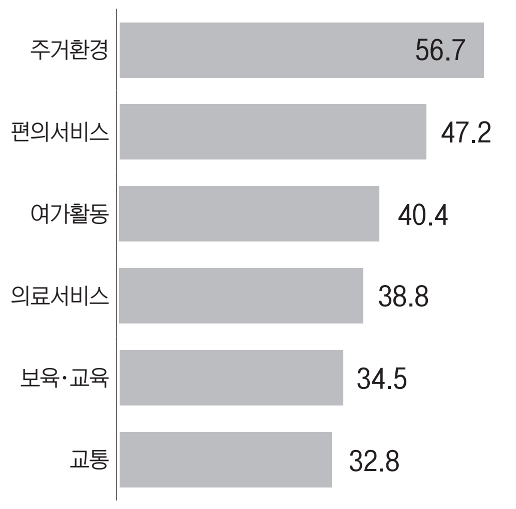
열악한 교육환경에…혁신도시 10.3% '기러기 가족'

■나주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



■정주여건별 만족도



국토교통부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…나주 혁신도시 만족 44.4%
주민 10.3% 사설학원·중등교육 시설 부족 등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아
29.3% "주말에 혁신도시 벗어난다"…가족 이주율 69.9% 평균 턱걸이

자녀가 있는 나주 혁신도시 거주민 10가구 중 1가구는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이유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주말에 혁신도시에 머무는 주민 비중은 70%에 불과했다.

이 같은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진행한 '2020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' 결과에 담겼다. 광주·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사는 20세 이상 637명 등 총 4943명이 지난해 2월~5월 면접·온라인 조사에 응했다.

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·전남 혁신도시 주민들의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 비율은 44.4%로 집계됐다. 불만족은 10.5%, 보통은 45.1%로 나타났다.

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만족률은 45.5%로, 광주·전남은 부산(68.1), 경남(52.1), 강원(45.6), 경북(45.3)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.

광주·전남 혁신도시 만족도를 6가지 정주여건별로 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률이 56.7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편의서비스 환경(47.2%), 여가활동환경(40.4%), 의료서비스 환경(38.8%), 보육·교육환경(34.5%), 교통 환경(32.8%) 등 순이었다.

응답자의 60.4%는 살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. 전세(21.8%)와 월세(11.1%), 전세+월세(5.8%), 공용 공간이 있는 쉐어하우스(0.3%)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. 전체의 81.1%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.

혁신도시 주민 45.0%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매매(전·월세) 가격이 '비싸다'고 생각하고 있었다. '싸다'고 응답한 비율은 9.0%, '보통'은 45.9% 비중을 차지했다.

취학(예정) 자녀가 있는 응답자 219명에게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10.3%(23명)는 '함께 살지 않는다'고 답했다.

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를 묻자 '주변에 다양한 사설학원이 없어서'(28.0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 ▲중·고교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(25.1%) ▲도서관·청소년 수련시설 등 평생교육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(17.2%) ▲영·유아 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(17.0%) 등 이유도 있었다.

여가활동환경이 아쉬운 탓에 주말을 혁신도시 밖에서 보내는 주민 비율은 29.3%에 달했다.

10개 도시 평균 주말 체류 비중은 71.5%로, 울산(64.0%), 전북(67.7%), 대구(68.3%), 광주·전남(70.7%) 순으로 낮았다.

나주 혁신도시 거주민에게 문화·체육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물어보니 '혁신도시 안'은 67.2%, '혁신도시 인근도시'는 32.8%의 비율로 나뉘었다.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로 영화관(17.9%)과 공연장(16.2%), 스포츠센터(13.5%), 문화센터(13.4%) 등을 1순위로 들었다.

주민 절반 이상(56.8%)은 자가용이나 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. 버스·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은 23.0%, 도보는 14.4%를 차지했다.

응답자 27.0%는 시내버스·도시철도의 운행횟수와 노선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. '보행환경 개선 및 정비'(12.8%), 주차공간 증대(11.5%), 버스 정류장 추가 신설(11.4%) 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.

조사에 응답한 혁신도시 주민 절반 가까이(49.0%)는 광주에서 살다가 나주에 둥지를 틀었다. 전남 다른 시·군에서 이사를 온 비중은 32.0%였고, 서울(9.4%), 경기(2.7%), 충남·전북(각 1.1%), 인천(0.9%), 대전·부산(각 0.8%) 등이 이전 거주 지역이었다.

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가장 큰 혁신도시는 강원(23.1%)이었다. 이어 제주(18.8%), 충북(17.1%), 광주·전남(13.0%), 전북(8.7%), 대구(7.6%), 경북(6.9%), 부산(5.1%), 경남(4.7%), 울산(4.4%) 등 순으로 높았다.

지난해 기준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 평균은 66.8%였다.

10개 도시 가운데 부산이 92.9%로 압도적으로 많았고, 전북(70.8%), 광주·전남(69.9%), 대구(69.4%), 경북(68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평균을 밑돈 지역은 충북(50.0%)과 제주(54.7%), 경남(55.6%), 강원(64.8%), 울산(66.7%) 등 5곳이었다.

조사를 벌인 국토부 측은 "전남도는 공공기관 임직원 정착지원금으로 200만원, 광주시를 포함한 8개 시·도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"며 "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에만 열을 올리기보다는 우수한 학교시설과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 적인 대책을 수립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"고 제안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'호국보훈의 달'을 맞아 8일 광주·전남 8개 기관이 보훈가족에 총 6000만원 상당 위문품을 전했다. 왼쪽부터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,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, 임성현 광주지방보훈청장, 강태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처장, 김선국 한전 광주전남본부 차장. 〈농협 광주본부 제공〉

농협 광주본부 등 8개 기관 '보훈의 달' 맞아 보훈가족에 위문품 전달

농산물 꾸러미 등 총 6000만원 상당

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8개 기관·기업이 '호국보훈의 달'을 맞아 위문품으로 보훈가족을 지원했다.

농협 광주지역본부 등 8개 기관은 8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'보훈가족 사랑나눔' 행사를 열고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.

참여 기관은 농협 광주본부와 한국전력공사,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, 한전KDN, 한국농어촌공사, 광주신용보증재단,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,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총 8개 기관·기업이다.

이들 기관은 농산물 꾸러미와 생필품 등 총 6000만원 상당을 보훈가족에 전했다.

임성현 광주지방보훈청장과 강형구 농협 광주본부장은 이날 재가복지대상자인 참전 유공자를 찾았다.

이들은 참전 유공자에게 나라를 지켜낸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농산물 꾸러미 등 위문품을 건넸다.

강형구 본부장은 "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"며 "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중소 수출기업 '해상·항공운임 특별융자' 지원

무역협회, 200억원 연1.5% 융자
무역보험공사, 보증 수수료 반값

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'해상·항공운임 특별융자'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.

우선 무역협회는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을 연 1.5% 금리로 융자하기로 했다.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수수료를 50% 감면키로 했다.

신청대상 기업은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사 중 지난해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. 신청 시 올해 해상·항공운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(B/L)·항공화물 운송장(Air waybill)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기업 당 융자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며 융자기간은 총 3년(2년 거치, 1년 분할상환)이다. 선정된 기업은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무역협회 협업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첨부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.

무역협회 관계자는 "이번 특별융자가 수출기업의 해상·항공운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한편 해상·항공운임 특별융자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선정된 기업은 7월30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kwangju.co.kr

광주상의 'FTA 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' 내일 실시

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0일 지역기업의 FTA 활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'FTA 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'을 개최한다.

이번 교육은 지역 수출 회복세 및 원산지증명서 기초교육에 대한 수요에 맞춰 마련됐다. 교육과정은 ▲FTA의 관세특례법 및 FTA 협정 ▲FTA 활용을 위한 기초교육 ▲FTA 원산지증명 작성 실무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을 중심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.

교육 수강 시 수출 담당자들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 실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, 수료시 '인증수출자 점수 6점'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한편 2011년 개소한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기업들의 FTA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FTA 실무교육, FTA 상담 및 컨설팅,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, 통·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FTA 활용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.

/박기웅 기자 pboxer@